

# 남북 사회문화협력 비전과 발전 과제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의미<sup>1)</sup>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평화적 남북 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sup>2)</sup>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민간의 중재 역할 가능 등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도움을 준다.<sup>3)</sup> 특히, 2005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김 위원장 방북 면담(7. 16)시 8. 15를 계기로 축구경기를 개최

1) 본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필요하다”, 『현안과 과제』, 2013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2)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2012.7.26.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3) 2012년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4.3%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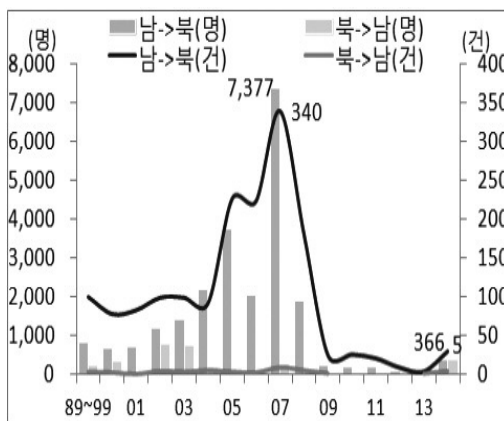
하자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제의를 전달하여 같은 해 8월 14일 남북 통일 축구대회 개최가 성사되는 등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간의 중재가 가능한 영역이다.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나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교류를 계기로 재가동되고 있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5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였다. 다만, 2014년에는 남북간 교류 건수 36건, 방문인원 748명으로 체육 교류를 중심으로 사회문화협력 재가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sup>4)</sup>도 급감하여, 2014년에는 28.5억 원(2007년 69.1억 원 대비 2/5 수준)이 집행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체육교류에 대한 북한 참가를 지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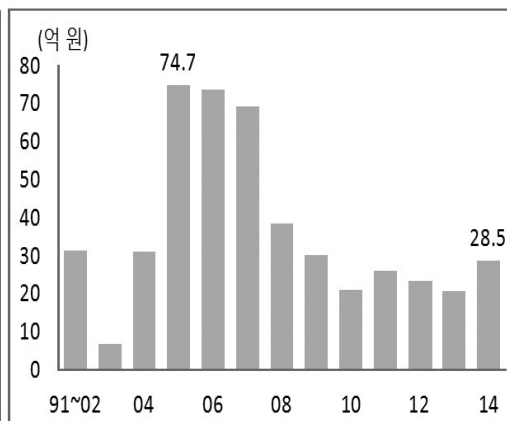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광복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협력 지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

4)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10조 6,985억 원 집행, 이 가운데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0.44%에 해당하는 474.7억 원이 집행

##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한계

### ①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다.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 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졌다.<sup>5)</sup>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일부 사업만 유지되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급 3인이 참석하여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등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② 2003~07년간 사업 승인 집중

남북 사회문화협력 사업 승인은 2003~07년에 집중되어 있다. 1991년부터 2014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7건 가운데 2003~07년간 승인 사업이 121건 (전체의 77%)에 달한다.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4년 말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7개 이다.<sup>6)</su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997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하였으나, 1998~2002년간 27건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07년간 121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급감하여 2014년까지 사회문화협력 사업 승인은 6건에 그쳤다.

5)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 17~36.

6)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

(단위 : 건)

연도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	11	14	합계
건수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1	1	1	157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③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회담은 체육회담 위주로 진행되었다.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으로 총 55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7건(전체의 85%)이 체육 분야 관련 회담이며, 2014년 7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이 가장 최근에 개최된 회담이다. 총 55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7건이 체육 분야 관련 회담이다. 교육학술 분야 회담은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접촉(2005. 9~2007. 4) 등으로 주로 역사 공동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회담은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등이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회담 추이 〉

(단위 : 건)

연도	79	84	85	86	87	89	90	91	02	03	04	05	06	07	08	14	합계
건수	4	3	1	2	1	9	7	7	2	1	1	6	3	6	1	1	55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http://dialogue.unikorea.go.kr>) 참고

④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사회문화협력관련 남북간 방문 건수 및 인원은 종교 분야가 476건, 9,440명으로 가장 많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4년 말까지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708건으로 26,521명이 상호 왕래하였

다.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은 종교(27.9%), 체육(20.4%), 교육학술(19.2%), 언론출판(17.9%), 문화예술(9.8%), 과학기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에서 남으로 방문은 체육 분야가 전체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현황(1989년~2014년) 〉

(단위 : 건, 명)

구 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 육	종 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시민사회	계
남→북	316 (3,806)	159 (2,452)	318 (4,155)	473 (9,381)	303 (2,949)	73 (400)	10 (105)	1,652 (23,248)
북→남	12 (105)	8 (540)	30 (2,509)	3 (59)	3 (60)	0 (0)	0 (0)	56 (3,273)
합 계	328 (3,911)	167 (2,992)	348 (6,664)	476 (9,440)	306 (3,009)	73 (400)	10 (105)	1,708 (26,521)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주 : 시민사회 구분은 2009년 신설.

### ⑤ 분야간 시너지 창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되는 등 분야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되어 분야간 시너지가 창출되었는데,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이 좋은 예이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지속되었다.

〈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

구분	특 징	성 과	한 계
종교	-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li> <li>-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li> <li>-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의 정례화 미흡</li> </ul>
교육학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범위부터 협력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등재, 장기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li> </ul>
언론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li> </ul>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li> </ul>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우수한 인적 인프라 구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제도적 제약</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지원 중심에서 농업 협력으로 발전, 사회문화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사례 구축, 남북 공동 대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광복 100주년을 내다 본 남북 사회문화 비전과 발전 과제

광복 100주년을 내다 본 남북 사회문화 비전은 하나의 한반도(One Korea)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이다. 통일한국시민 이루기를 위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③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문화적으로는 ① ‘한반도 역사 바로 세우기’, ②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③ ‘新경평대축제’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 광복 100주년을 내다 본 남북 사회문화 비전과 발전 과제 〉

구분		구분
문화예술		- 통일한국시민(One Citizen) 이루기
실천 과제	사회	①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추진 ②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③ 조림 및 산림 축산 방제 사업 추진
	문화	④ '한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⑤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⑥ '新경평대축제' 추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① 사회 : '북한주민 건강증진지원사업' (의료+영양지원 package) 추진

의료·보건 부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구·장비, 응급의료 설비 등 의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1단계로는 최우선 관리 대상인 전염성 질병(결핵, 폐렴, 간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어린이 질병예방 기금(가칭)' 모집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 기초질병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로는 국제적십자사(IFRC)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 협력을 통한 간편 수술기구(동상 치료를 위한 긴급 왕진 가방 등) 및 응급의료 설비 지원 추진이 가능하다. 3단계로는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한 의약제조시설 개·보수 지원(평성, 순천, 라남 제약공장), 병원 현대화, 남북 영양제 공동 개발, 북한 의료진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영양지원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영유아 및 산모, 아동 및 노인 등)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및 식료품 제조장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단계로는 건강취약계층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분유 등 영유아 영양식 긴급지원, 산모 영양지원을 위한 철분제, 미숫가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단계로는 취약계층 생명 보호 및 일반주민의 영양실조 해소를 위해 기존 빵공장·영양식 생산 공장

확대 지원,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FAO 등)와 연계한 각 시군별 신규 생산 공장(콩우유, 영양 비스킷 등) 건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단계로는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단계별 추진 전략 〉

구분	의료 보건 부문	영양지원 부문
1단계	- 긴급 의약품 상시 지원 체제 구축 •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병	- 건강취약계층 생명 보호 • 영유아 영양식, 산모 긴급지원 등
2단계	- 국제사회 협력 통한 의료기구 지원 • 긴급 왕진 가방 지원 등	- 건강취약계층+일반 주민 영양 지원 • 기존 생산 공장 확대, 신규 건설 등
3단계	- 북한 의료 시스템 복원 위한 지원 • 의약품 제조시설, 병원 현대화 등	-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 1~2단계 사업 전국단위로 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② 사회 :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추진

남북한 공유하천(한강하구~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 공유하천의 홍수조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남북간 신뢰회복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체상태인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도 홍수조절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임진강유역 종합개발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임남댐, 평화의댐, 화천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북한강 유역에서 남한측 홍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홍수 예·경보 설비를 북한강 유역에 지원하고 임남댐 하류방류를 위한 직하류 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홍수 예·경보 장비 지원은 우선 임진강, 북한강 공유하천에 구축하되 점차 타 유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종합 수자원개발계획(용수공급, 치수용 댐건설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 대비 용수 공급 및 전력과 연계하는 홍수 방어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남북경협 확대 등으로 북한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 생활



용수 상수도의 수요 및 공산품 제조를 위한 공업용수 수요는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식량증산을 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③ 사회 :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추진

북한 산림 복구 계획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산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산림자원 현황 및 황폐지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산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 산림협력 공동 실무위원회’(가칭) 구성하여 남북 당국자 및 전문가와 추진 사업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기구로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쪽의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원한 산림 녹화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종합적인 북한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동 산림 방제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방제 기자재, 농약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 때 피해 임지에 대한 집중적인 병해충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산림 병해충 발생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 방제사업 실행 및 공동평가를 통해 방제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금강산, 묘향산 등 산림 보호 지역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피해가 발생할 시 남북 공동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대북 축산 방제 확대도 필요하다. AI 및 구제역 바이러스는 육지에서 50km까지 공기로 전파될 수 있어 DMZ 부근 남한 축산농가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가축전염병 소독 및 백신접종 지원 등 ‘남북한공동방제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조사연구를 북한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한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북한의 국가수의방역위원회 간 핫-라인 설치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교류 협력의 질적 확대를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가축전염병 방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④ 문화 : ‘한반도 역사 바로세우기’ 추진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의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 공동 연구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문화 : ‘남북 청소년 하나되기’ 추진

남북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 남북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 역사 문화 및 관광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 ⑥ 문화 : ‘新경평대축제’ 추진

‘新경평대축제’ 추진을 통해 남북간 체육·민속문화·순수문화 부문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경평축구대회 및 통일농구대회 부활,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체육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민속문화 부문에서는 남북한 민요, 남한의 봉산탈춤과 북한의 북청사자놀이 등 무형문화재와 관혼상제 등 전통민속문화의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씨름, 줄다리기, 택견, 팔씨름 등 민속 스포츠 교류의 추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문화 부문에서도 남북간 순수문화 교류전의 추진이 가능하다. 미술, 음악, 서예, 공예 등 순수문화 부문에서 남북간 정기 문화교류전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신진 예술가 발굴 및 관련 시장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사점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적 지원 등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기추진 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학술·언론출판·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유적 발굴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등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무심기사업,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統**